

##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문재인 정부 · 민주당에 경고

### 1일, 제조노동자 결의대회...근기법 개악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제조특별법 제정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만든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제조업 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조연대는 개악 저지 투쟁에 앞서 ▲제조업 갑질 119 운영 ▲방송토론 등 국민과 직접 소통 홍보 사업 ▲국회, 정부청사 1인 시위를 제조연대 대표자 포함 전국 사업장 확대 전개 등 선전 홍보전에 주력하기로 했다.

제조연대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레이테크분회의 최저임금 관련 노조탄압 현장 증언을 듣고, 상징

이날 결의대회 격려사에 나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주일만 7일이라는 상식이 깨지고 있다. 비상식은 양대노총의 이름으로 심판하자”라며 제조노동자들을 격려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해달라는 노동자와 외국 자본, 국부 유출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가 죄인 취급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제 올라 올이 연대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양대노총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은 연대사에서 “국회를 대표해 죄송하다”라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산업현장 위험 외주화 중단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신환섭 화학연맹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동명 화학연맹 위원장은 제조연대 투쟁 결의문을 발표

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 요원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조연대 대표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악안 즉각 철회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즉각 중단 ▲제조특별법 제정 ▲제조특별법 제정으로 구조조정 저지 ▲제조특별법 제정하고 사회적 대화 실현 등 다섯 개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제조연대 대표자들은 투쟁 결의문에서 “근로기준법 환경노동위원회 상정과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상정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개악 시점으로 간주하고, 강행 움직임을 가시화할 경우 즉각 농성에 돌입 한다”라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개악 강행 시 ▲제조연대 투쟁본부 체계 즉각 전환 ▲대표자 4인 선도투쟁 ▲확대간부 파업과 상경투쟁 ▲2만 전국제조노동자대회를 열어 2대 개악 저지 투쟁에 조직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식을 마친 뒤 행진에 나섰다. 제조연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나선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더불어 민주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은 꿈도 꾸지 말라는 제조노동자들의 경고와 양대노총 제조연대의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결의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맞소금 봉지를 들어 보이며 “국회는 노동법 개악을 두고 노동자를 상대로 간을 보지 말라”라며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제조노동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지 않고, 앞장서서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전체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마다 양대노총 제조노동자가 함께 투쟁했다”라며 “양대노총 제조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제조업 발전특별법 쟁취를 위한 투쟁의 포문을 열자”라고 호소했다.

# “헌법노동법에 직접 고용 명시하자”

아사히글라스 무혐의 처분 검찰 문제점 국회 토론회… “파견법 무지, 자본 면죄부 주기 급급한 검찰이 문제”

금속노조와 노조 법률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2월 1일 국회 의원회관 2 간담회실에서 ‘아사히글라스 사례로 본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 기소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금속노조와 민변은 검찰이 불법파견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관해 검찰에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넘겼다. 같은 해 12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파견법에 무지하고, 자본의 변명을 듣고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한 검사들과 노동자에 대해 뼈뺀 시선을 감추지 않는 공안부라는 검찰 조직이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자본과 검찰이 우리 투쟁이 불법이라고 해도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굽히지 않고 싸워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은 ‘혐의없음’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파견에 관해 기준이 달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다.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는 기준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불법파견에 관한 정부 기준은 2007년 4

월 정부 부처 사이에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결론을 막기 위해 마련했으나, 2010년 이후 파견법에 관한 법원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수사기관은 사건을 최대한 지연시키다 자본 측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관련 메뉴얼을 최근 판례에 따라 개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한다면 불법파견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회자로 나선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검찰의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불기소 처분은 ‘원청이 작업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생산시스템과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유기 생산공정’ 등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의 특성과 법원 판결의 판시를 무시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차헌호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2015년 7월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년 넘도록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분노했다.

토론회자들은 불법파견 수사에 관한 검찰의 근본

인식을 비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검찰은 근대 노동법의 대원칙인 ‘중간착취 금지’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노동을 왜 금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대책으로 “헌법과 노동법에 직접 고용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가 아사히글라스에 ‘파견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회사 측은 시정명령을 전면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노동부가 사측에 시정명령을 하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도 우선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할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진환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노동부, 검찰, 법원은 같은 사안을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파견법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